

## 사·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전략은 '시너지 확대'

광주시, "에너지 관련 기관 물색"  
전남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농·수협 본사, 공항공사 등 추진  
"구체 가이드 라인 나오면 협력"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을 예고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양 사·도는 2차 지방 이전의 목표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시너지 확대'로 공감대를 맞춘 상황이지만 정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독자적인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16일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업무보고에 따라 전남도의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정치력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

다. 시는 광주·전남이 지난 2005년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공동유치처럼 해야 한다는 기조지만 구체적인 이전 희망기관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등 1차 때 유치한 에너지 관련 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물망에 올려두고 있다.

도는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준공공기관인 농·수협중앙회, 농·수협은행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여론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라는 점,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생명 분야의 공공기관 최대 집적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수협 본사의 전남 이전을 통해 기존 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서 고안한 것으로

산업은행이 영남권으로 내려가면 농업과 수산업의 중심지 전남도는 농·수협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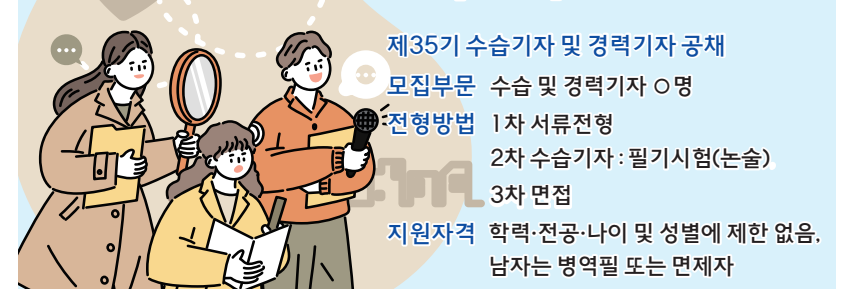
다만, 이들 기관의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는 '중앙회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8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경북은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유치를 염두에 두고 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면서 계속  
최황지 기자

알립니다

### 멀티미디어 전남일보 '주역'을 찾습니다



제35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공채  
모집부문 수습 및 경력기자 0명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수습기자: 필기시험(논술)  
3차 면접  
지원자격 학력·전공·나이 및 성별에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3년 2월 17일(금) 15시까지  
\*접수처 E-mail : recruit@jnilbo.com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필기시험 : 2023년 2월 21일(화) 10:00 ~ 예정  
전남일보 승정문화관(지하 1층)  
■ 면접 : 대상자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지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본사 소정 양식, 전남일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경력기자는 기명기사 3건 이상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일보 경영본부(062-510-0421)로 연락바랍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시 광주·전남 대상자 36명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반복범행·13세 미만 아동 범죄자  
유치원 등 500m 이내 거주 제한  
사·도 각각 18명 해당 지역 거주

법무부가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 36명의 성범죄자가 집을 옮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및 교육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제도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와 공원으로부터 약 61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법무부 운영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리미'를 통해 광주·전남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실제 거주지 기준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성범죄자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성범죄자 119명 가운데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범죄자는 18명이다. 자치구 별로는 △동구 2명 △서구 5명 △남구 3명 △북구 7명 △광산구 1명 등이다. 전남의 경우 144명 중 18명이 제시카법 적용 대상이다. △목포 5명 △여수 1명 △순천 3명 △나주 4명 △광양 3명 △고흥 1명 △무안 1명 등이다. ▶관련기사 4면 강주비 기자



광주·전남반도체 산업육성 상생협력 김영록(왼쪽부터) 전남도지사, 안영우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사무총장, 이종수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부회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 손운철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부회장, 김서균 한국팹리스협회 사무총장,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광주시청에서 반도체 초격자 허브 구축을 위한 '광주·전남반도체 산업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양배 기자

우리 고향 살리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 제1회 호남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전국 8도 고향사랑 페스티벌]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수원컨벤션센터

주최 전남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



내고향 살리는 따뜻한 마음